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2. 26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장우철, 서기관 전인재, 사무관 공두영, 주무관 이승학 ·☎ (044) 201-4388, 4383	
담당 부서	한국토지주택공사	담당자	·부장 윤정훈, 부장 김정구, 부장 정우신, 차장 이상구 ·☎ (055) 922-6770, 4201, 4221, 6772	
담당 부서	한국부동산원	담당자	·처장 김세형, 부장 서재일, 팀장 류현희 ·☎ (053) 663-8125, 8788	
담당 부서	서울주택도시공사	담당자	·실장 김영준, 부장 천성희, 차장 김채원 ·☎ (02) 3410-7011, 7026, 7028	
담당 부서	경기주택도시공사	담당자	·처장 박세원, 부장 박정희 ·☎ (031) 220-3050, 3051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가능		

변창흠 장관,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

- 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를 위해 긴밀 협력기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,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한국부동산개발협회,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「공공주도 3080⁺ 대책(2.4)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.
- 이날 회의에서는, ①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, ②3080⁺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”면서도,
 - “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,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”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,
 - “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,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하였다.
-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,
 -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, 사전검토 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,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·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.
-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,
 -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,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,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.

-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「공공주도 3080⁺」 대책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.
-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물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하였으며,
-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.
-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,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-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“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,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”이라고 강조하며,
- “현재 지자체,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공두영 사무관, 이승학 주무관(☎ 044-201-4388, 43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